



기후변화의 리스크에 대한 에너지업계의 대응



최근 한 경제연구기관에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자료를 분석해 만든 '2007년 9대 트렌드 예측'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신흥개발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문제로 기후변화현상이 심화되

면서 이를 관리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인류의 건강과 생활 전반에 걸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굳이 이러한 언급이 아니더라도, 이미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이나 생활, 국제경제의 흐름에까지 깊숙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도, 산업발전에 따른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기후변화 문제는 가까운 미래에 닥칠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현상이 종종 일어나곤 한다. 한 여름의 태풍 또는 겨울의 폭설 등 자연재해가 매년 지구 곳곳을 강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삼면이 바다인 해역의 생태계가 변화하는 등 현안문제로 기후변화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기후변화는 어떠한 문제들을 만드는가? 제일 먼저 생태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식량문제를 들 수 있겠다. 통제되지 않은 지구 온난화의 결과는 지역적 기후변화를 일으켜 기온, 강수, 수증기, 기단의 성질을 바꿔놓을 것이 분명하다. 그 결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의 재배현황을 뒤바꿔버릴 수도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30년 후에 중위도 지방에서 활용가능한 토양 수분은 약 3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화학적으로 다양하게 변환된 비료생산이 증가하고 관계사업이 늘어나면 이 역시 비용과 역반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영향은 빙하와 빙모의 용해로 해수면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미 현 세기에서 빙하의 용해는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IPCC)에 따르면, 현존하는 산악 빙하의 1/3 또는 1/20이 다음 세기에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수면 상승은 적게는 30~110cm, 많게는 6m가 될 것이다. 해수면 상승은 저지대의 침수와 주민들의 집단 이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국제적인 분쟁과 비용의 증가를 불러올 것이 틀림없다. 여기에 더해 인류의 생활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전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구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주범으로 지목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법과 의견도 각양각색이다. 국제적으로 개발도상국 입장이 다르고, 선진국 입장이 다르다. 에너지자원 보유국이나 아니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위도와 경도에 따른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해법이 제각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이 풍부하지도 않고 산업의 국가경쟁력이 여타 국가에 비해 월등하지도 않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의무부담에 대한 국제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산업의 에너지원단위를 낮추는 한편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았다고는 하나 대표적인 무역국가로서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에너지설비의 운용을 최적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다. 기 설비의 최적운용을 위해서는 에너지설비의 고효율화 내지는 시설투자가 필수적이다. ESCO사업은 그런 측면에서 기후변화리스크를 확실히 줄여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ESCO의 또다른 이름이 기후변화대응전문기업이라는 측면에서 ESCO자금의 전면적인 확대를 통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사)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회장 유제인